

# 광주·전남 경제통합부터...군공항 이전은 의견 엇갈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은 행정통합과 관련 경제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등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 했다. 물류나 사람의 이동을 촉진하는 철도·도로 네트워크의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우선 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는 시도민의 의견이 엇갈렸다. 시민들은 민간공항을 존치하고 군공항을 전남도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나 도민들은 이전대상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민간공항과 함께 이전해야 찬성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광주시 현안 광주형 일자리 확대 가장 시급 코로나 방역·군공항 이전 순 10명 중 8명 군공항 이전 찬성 시·군 통합은 점진적 통합 바람직

광주시민들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광주형 일자리 확대, 코로나19 방역 대응, 군공항 이전, 호텔 및 대형할인점 입점 등을 꼽았다. 또 공항이전과 관련해선, 군공항은 이전되 민간공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섰다.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은=광주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0.9%가 '광주형 일자리' 확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지목했다. 남구(35.8%), 40대(38.1%),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36.9%)에서 높게 나왔다.

민선 7기 광주시장 대표 성과로 꼽히는 '광주형 일자리'는 23년만에 국내 자동차 공장인 GGM(광주글로벌모터스)을 건설하고, 경형 SUV 캐스퍼(CASPER) 출시에 성공한 사업이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준비 중"이라

고 밝히기도 했다. 광주시민들은 이어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응(15.6%)'을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답했다. 오랜 숙원사업인 군공항 이전(14.8%)과 호텔 및 대형할인점 입점(14.3%)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컸다. 군공항 이전에 대해선 60세 이상(19.5%) 및 50대(19.0%) 등에서 전체 결과보다 높았다.

이 밖에 광주·전남 행정통합(6.3%), 인공지능(AI) 사업 구축(5.9%), 여수산관광단지 개발(4.4%), 잘 모름(4%), 기타(3.8%) 등의 순이었다.

◇군공항은 이전, 민간공항은 존치=광주·전남 대표 갈등 현안인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민의 생각은 군공항 이전에 대해선 10명 중 8명이 찬성한 반면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선 엇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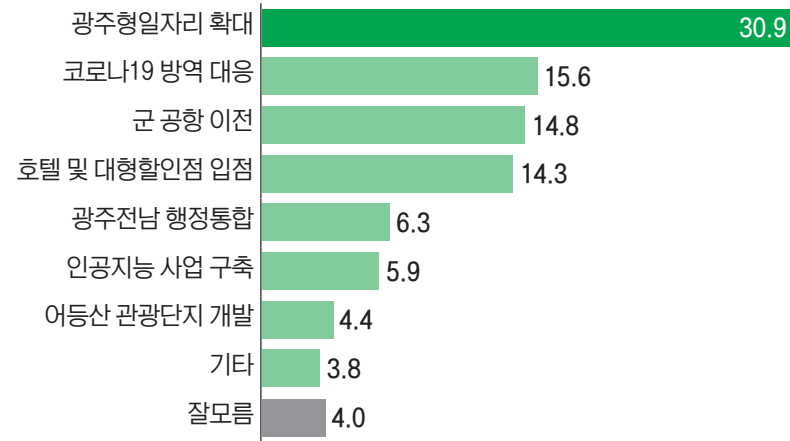
'군공항은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존치하자'(47.0%)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민간·군공항 함께 이전(31.2%)이 뒤를 이었다.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은 15.1%였고, 잘 모른다는 답변은 6.6%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재 군공항 이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전 지역이 수용 가능한 국가차원의 획기적·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시·도 행정통합 이전 앞서 경제통합부터=광주시민들은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의 통합에 대해 찬성(62.0%)하면서도, 통합속도에 대해선 사전 경제통합 등을 통한 점진적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답 시민 중 36.9%는 행정통합 이전에 경제 통합부터 점진적으로 가야한다고 답했다. 행정통합을 찬성한다는 답변은 25.1%로 그 뒤를

### ■ 시급한 추진 과제

#### ◆ 광주



이었다. 반면 행정통합을 반대한다(24.8%)와 잘 모른다(13.2%)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행정통합 논의에 앞서 시민의 이해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30일까지 이틀간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8명을 대상으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안심번호 80%와 유선전화 20%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4% 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율은 4.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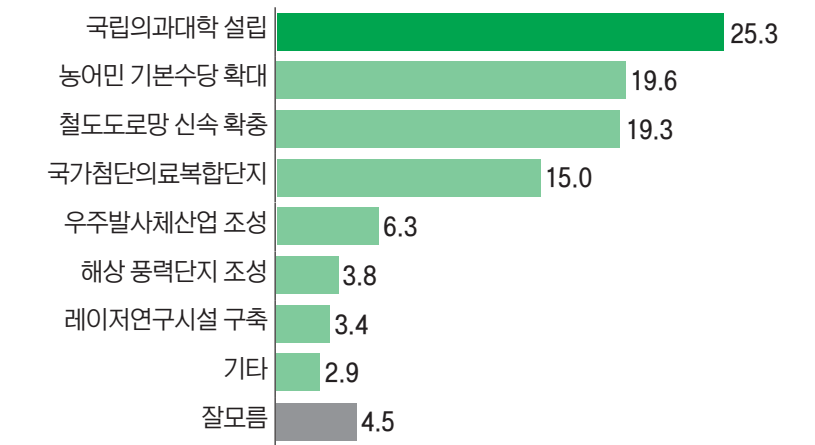
### ■ 전남도 현안

## 가장 시급한 현안 의과대학 설립 군공항 이전 지역 정부 지원 필요 군공항 조건없는 이전 찬성 20% 시·군 경제통합 우선 34% 최고

전남도민들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로 국립의과대학 설립(25.3%), 농어민 기본수당 확대(19.6%), 철도·도로망 신속 확충(19.3%),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15.0%) 등을 꼽았다. 열악한 의료·복지·SOC(기반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 산업으로 전남도가 역점 추진중인 우주발사체산업클러스터 조성(6.3%), 해상풍력단지 조성(3.8%),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신축(3.4%) 등은 아직 도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은=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서부권(28.8%), 40대(32.0%), 사무·관리·전문직(30.3%) 등에서, 농어민 기본수당 확대는 광주·전남교권(25.2%), 60세 이상(24.2%), 남성(23.1%), 농업·임업·어업 종사자(46.8%)에서 각각 높은 선택을 받았다. 철도·도로망 신속 확충은 30대(26.5%), 사무·관리·전문직(26.1%) 및 자영업자(24.1%) 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전남도민들은 전남의 미래를 이끌 핵심사업보다는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 불편하고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 ◆ 전남



◇군공항 이전대상지 정부 지원이 중요=광주일보에 '광주·전남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시도민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기로 했다. 전남도민은 대체적으로 광주군공항 이전에 찬성했으나, 정부가 지원을 약속하거나 민간공항과 함께 이전하는 등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부가 이전 대상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다면 찬성하겠다는 의견이 전체의 26.1%를 차지했으며, 이어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면 찬성하겠다는 의견이 20.3%였다. 조건 없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찬성한다는 의견은 20.4%,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20.0%로 각각 나타났다. 군공항 이전 찬성 의견이 60.8%를 보였다는 점에서 광주 시와 전남도가 차기 정부를 상대로 이전 대상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대책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 광주 시와 전남도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성숙한 논의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경제통합부터 점진적으로 가야=부산·울산·경

남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대응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움직임 속에 광주시가 제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도민들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민들은 다만 시간을 두고 경제 부문부터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봤다. 경제 통합부터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는 답변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29.6%로 그 뒤를 이었다. 행정통합을 반대한다는 답변은 23.9%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12.7%로 나타났다.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비해 아직도 열악한 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낸 뒤 행정통합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도민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30일까지 이틀간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안심번호 80%와 유선전화 20%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4% 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율은 5.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의 상생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시민들은 민간공항 존치 및 군공항 이전을, 도민들은 이전대상지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 군공항 이전 등을 선호했다.



전남의 가장 큰 현안으로 도민들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꼽았다.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선 지역에 근무할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민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 농장에서 식탁까지 탄소중립 실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공공기관 최초

☑ SBTi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가입

☑ Business Ambition for 1.5°C 캠페인 참여

##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탄소저감을 위해 **우리지역의 저탄소·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남김없이** 먹는 날입니다.